

FIP-2009-0006 (통권 제130호, 2009. 5. 15)

서비스산업 전략보고서 ①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과제

ISSUE
PAPER

Contents

<요 약>	4
I. 서비스산업의 육성 필요성	7
II.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9
1. 지속되는 서비스수지 적자	9
2.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성장 기여도	11
3.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낮은 생산성	12
4. 과도한 경쟁제한 규제	15
III.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17
1. 경쟁촉진을 통한 투자 유인	17
2. 혁신성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18
3. 정책지원 확대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	19
4. 구조조정, 고용유연성 확보를 통한 고용비중 확대	19
5.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인식전환	20
IV. 분야별 정책과제	21
1. 관 광	21
2. 의 료	23
3. 교 육	25
4. 문화콘텐츠	27
5. IT서비스	28
6. 유 통	29
7. 디자인	31

-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본회 미래산업팀 김동현 선임조사역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3771-0293 FAX : 3771-0110 E-mail : dan5733@fki.or.kr

검토 배경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3/4을 넘고 내수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세계 경제 향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특히나 지금은 세계 물동량 자체가 감소하는 글로벌 경기침체기인데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이자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미국에서부터 무역장벽을 쌓는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가 발흥할 조짐이 확산되고 있어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때, 서비스산업은 여러 측면에서 위기극복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첫째, 서비스산업은 기본적으로 내수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선진화시키는 정책은 해외요인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시정하고 점증하는 경제 민족주의에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특히 우리의 경우 성장 잠재력이 높아 당면과제인 신속한 경기회복과 함께 점차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실업 대란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그동안 각종 진입규제와 공익성 강조로 인해 국민경제내 비중과 생산성 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사업체 규모가 영세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서비스산업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한다면 그 만큼 발전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서비스산업은 외화가득률이 높는데도 그 취약성 때문에 오히려 외화유출의 주요 원인이었는데, 이를 발전시켜 외화가득산업으로 반전시키게 되면 지금의 국제금융위기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된다.

넷째, 서비스산업은 의료, 문화, 관광, 교육 등 대부분 국민생활의 편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이같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 **(필요성)**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해외요인에 취약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절실함

- 서비스산업은 성장잠재력이 커서,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임
 - *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증가추세(58%)인 반면, 제조업은 20% 후반대에서 정체 중이며, 고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고용의 67%를 차지

□ **(문제점)** 서비스수지 적자의 지속, 낮은 성장기여도, 생산성 저하, 진입·영업규제로 인한 경쟁력 취약 등이 문제

-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관광·유학 등 여행수지와 무역서비스·광고·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등이 적자의 상당부분을 차지
 - * 서비스수지(억\$) : ('03)△74.2 → ('06)△189.6 → ('07)△197.7 → ('08)△167.3
- 서비스산업의 고용·부가가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부가가치 비중은 OECD 평균에도 미달
 - * 제조업 비중(28%)은 OECD 국가 중 1위이나, 서비스업 비중(57%)은 OECD 평균인 7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최하위 노르웨이 53%)
- 도소매·음식숙박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 고용집중(총 고용의 26%), 영세성(평균 종사자 4명), R&D투자 부진(총 투자의 7%)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
 - * 서비스업 생산성 : 제조업의 40%, 미국의 40%, 일본의 50% 수준
- 각종 진입·영업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하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 등의 시장을 전문자격자가 독점하여, 서비스 품질이 저하
 - * 서비스 543개 업종 중 67%인 366개 업종에 진입장벽(허가, 지정, 신고 등) 존재

□ **(발전방안)** 경쟁촉진을 통한 투자 유인, 생산성 향상, 수요기반 확대, 고용흡수기반 마련, '산업'으로의 인식 전환 등이 필요

- 대내외 시장개방 및 차별해소를 통한 자본공급 확대 유도, 산업화 촉진
- 인력양성, R&D투자 확대, IT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 수출지원, 해외소비 대체 등 국내외 수요 확충
- 저생산부분의 구조조정, 고용유연성 확보 등을 통한 고용흡수기반 마련
- 비즈니스로의 인식전환, 종사자 마인드 제고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관광)** 제조업 대비 차별제도(세제, 부담금 등) 해소, 세제지원 확대, 수용태세 정비,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육성 등 시급

* 토지보유세 : 공장(재산세0.2%, 종부세 면세), 호텔·골프장(재산세0.2~4% + 종부세0.5~2%)

○ 서머타임제 실시, 관광숙박업 보유세·부담금 감면, 지방골프장과 동일하게 수도권 골프장의 세금부담 완화(개소세, 체육기금 폐지 등)

□ **(의료)**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을 통한 투자확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관광·u-헬스 등 융복합 신규수요 창출 등에 대한 지원 필요

○ 주식회사 병원 허용, 신기술·고급의료 등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민간보험 부담 활성화, 분쟁제도 구축·전문인력 교육 등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원격의료범위 확대·서비스제공 인력 자격요건 규정 등 u-헬스 활성화 지원

□ **(교육)** 시장개방과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부문의 경쟁을 촉진, 경쟁력 제고

○ 과실송금 허용·영리법인 참여 허용 등 해외대학 국내유치 활성화, 진학률·취업률 등 교육정보 공개 활성화, 공공투자 확대 등 e-러닝 적극 육성

□ **(문화콘텐츠)** 자금지원(융자, 완성보증제), 지재권 보호강화, 수출지원 시급

○ 완성보증제 활성화를 통한 자본투자 활성화, 지재권 보호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수출보험 확대(現 영화만 적용) 등을 통한 수출활성화

□ **(IT서비스)** 전문기업 육성, 거래관행 개선, 해외진출 확대로 수요기반 확충

○ 전문펀드 조성·세액공제 확대 등 해외진출 활성화, 대기업 참여제한·적정예산 편성 등 공공발주 거래관행 개선

□ **(유통)** 대규모 유통시설 입지제한 완화, 영업활동 규제 개선 필요

○ 자연녹지내 유통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유통시설 셔틀버스 운행 허용, 교외용 아울렛의 옥상광고 규제 완화(간판갓수 등)

□ **(디자인)** 기업디자인 역량 강화, 디자인전문기업의 대형화 등 시장규모 확대

○ 디자인인력 채용시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디자인 역량 강화, 특성화 대학 등 우수인력 양성, 보조금 등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턴트 양성지원

1. 서비스산업의 육성 필요성

- 경기침체의 장기화, 높은 무역의존도와 보호주의 대두로 인한 수출감소 등으로 인해 기존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는 성장과 고용창출에 한계
 - 높은 수출입 비중, 원유 등 수입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해 국내 무역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 * 무역의존도(GDP 대비 수출입비중, %) : ('02)57.5 → ('06)71.5 → ('07)75.1
 - * 일본(30.2%), 미국(23.0%) 대비 2~3배 수준
 -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각국의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자국 산업 보호와 고용확보를 위한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위축이 심화
 - 불황여파로 '09년 1월 수출이 급감(-33.8%) 하면서, 무역의존도가 75%를 넘는 개방형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경쟁국 대비 더욱 큼
 - 대공황 당시 각국의 경쟁적인 보호무역 조치로 세계교역량이 감소한 경험과 (4년간 70%감소) WTO 같은 국제조정기구의 존재로 인해 전면적인 무역분쟁은 없겠지만, 보조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구제금융 지원시 외국기업 차별 등 우회적 형태의 보호주의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 국내 상품수출에 대해 최근 2개월간 40건의 무역규제가 신설·강화중(KOTRA)
 - ** 공공부문 사업시 자국산 철강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한 美의회의 '바이 아메리칸' 조치, 중국의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사례 등이 대표적
 - *** 세계수입규제 1% 증가 → 한국수출 0.2% 감소(SERI, '09.3)
- 경기불황과 보호주의로 인한 수출감소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어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시급한 과제
 - 제조업 기반의 국내 경제는 금융위기 속에서 '09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 안팎으로 예측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
 - 원高, 내수부진, 수출둔화 등으로 '07년 4.9%, '08년 2.5% 등 경제성장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09년은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4%, IMF)
 - 민간소비도 '08년 4/4분기 -4.8%를 기록, '98년 이래 최악의 내수침체 상황이며, 수출 증감률도 '07년 12%에서 '08년 6%로 급감, '09년은 더욱 악화 전망

- 수출대비 현저히 낮은 내수의 성장기여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

* 내수 GDP 성장기여도(%p) : ('05)3.0 → ('06)4.1 → ('07)3.6 → ('08)0.3

* 수출 GDP 성장기여도(%p) : ('05)4.4 → ('06)6.4 → ('07)7.0 → ('08)3.8

□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경제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절실함

-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증가추세인 반면, 제조업은 20% 후반대에서 정체중이며, 서비스산업의 고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고용의 67%를 차지

<서비스업과 제조업 비교(%)>

		1995	2000	2005	2006	2007
·부가가치 비중	제조업	27.6	29.4	28.4	28.0	27.9
	서비스업	51.8	54.4	56.3	57.1	57.6
·고용 비중	제조업	23.6	20.3	18.5	18.0	17.6
	서비스업	54.8	61.2	65.2	66.0	66.7

주 1 : 부가가치 비중 =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국내 명목 총부가가치

주 2 : 고용 비중 = 서비스산업 고용/국내 총고용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각년도 & 통계청, 국민계정·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서비스산업은 성장잠재력이 커서,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임
 - '90년 이후 지난 15년간 제조업에서 약 67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서비스산업은 약 640만개의 일자리가 증가

* 일자리 변동 추이 (단위 : 만명) : 제조업 ('00)429 → ('05)423 → ('08.11)408

서비스업 ('00)1,296 → ('05)1,490 → ('08.11)1,580

*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의 1.7배로 일자리창출 효과가 큼

** 취업유발계수('03, 명/10억원) : (제조업)12.1, (서비스업)20.5

- 하지만 선진국 대비 낮은 부가가치 비중과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영세자영업 비중 과다 및 R&D투자 부족 등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 진입·영업 규제로 인한 경쟁력 취약 등 서비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해결이 시급

* 서비스수지(억\$) : ('03)△74.2 → ('06)△189.6 → ('07)△197.7 → ('08)△167.3

* GDP대비 서비스업 비중 : OECD 평균 68.9%('05) vs 국내 57.6('07)

* 서비스산업 생산성 : 제조업 생산성 대비 40%('07)에 불과,

생산성 지수 미국 246, 일본 188, 한국 100(OECD 24위)

II.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 ① 서비스수지 적자의 지속, ② 낮은 성장 기여도, ③ 생산성 저하,
 ④ 진입·영업규제로 인한 경쟁력 취약 등이 문제
- ☞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07년은 200억불에 육박
 - ☞ 선진국들은 서비스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반면, 국내 서비스산업의 성장기여율은 감소 추세
 - ☞ 저생산 업종에의 집중, 영세성, R&D 투자 부진 등으로 생산성 저하
 - ☞ 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나, 산업화 부족,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실정

1. 지속되는 서비스수지 적자

□ 서비스수지 적자가 '05년 이후 대폭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교육서비스 등 여행수지가 적자의 상당부분을 차지

* '08년에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확대가 다소 둔화됨

- 특히, 관광·교육·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서, 인프라 취약, 고비용구조, 해외소비 급증 등으로 인해 적자가 확대
- 반면, 운수, 금융은 국제물류 확대, 외국인투자 확대 등에 따라 흑자 실현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 추이(억불)>

	2004	2005	2006	2007	2008
서비스수지(총계)	△80.5	△136.6	△189.6	△197.7	△167.3
○ 여행부문	△62.8	△96.0	△130.6	△158.4	△80.5
- 관광(일반여행)	△38.0	△62.3	△85.8	△108.6	△36.2
- 유학연수	△24.8	△33.7	△44.9	△49.8	△44.2
○ 사업서비스	△50.4	△61.2	△71.7	△74.1	△145.1
○ 특허권 등 사용료	△25.8	△26.5	△26.0	△34.0	△31.4
○ 운수	48.7	37.3	26.7	44.8	63.9
○ 금융·보험 등 기타수지	9.8	9.8	12.1	23.7	25.7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 각년도

- 관광산업의 경우, 불거리, 관광인프라, 가격 경쟁력 등이 미흡하여 방한 외래객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소득증가 등으로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증가
 - 방한 외래객의 증가율은 중국·일본뿐 아니라 세계 관광객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
 - * 입국관광객 연평균 증가율('01~'06, %) : (한국)2.7, (중국·일본)11, (아시아)9.4 (세계)5.2
 - * 방한 외래객수(만명) : ('04)582 → ('05)602 → ('06)616 → ('07)645 → ('08)689
 - 반면, 해외관광은 '05년 1,000만 명을 넘어선 이래 방한 외래객과의 격차가 2배 가까이 나고 있으며, 해외 골프관광이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 내국인 출국자 수(만명) : ('04)883 → ('05)1,008 → ('06)1,161 → ('07)1,332 → ('08)1,199
 - * 해외 골프관광 여행객(만명) : ('03)36 → ('04)49 → ('05)57 → ('06)64
 - 지출액(억불) : ('03)6.5 → ('04)8.6 → ('05)10.7 → ('06)11.8
 - 외국어습득 목적의 조기유학도 2000년대 들어 크게 늘고 있으며, 대학 이상 해외유학도 '01년에 비해 '07년에 45% 이상 증가하였음
 - * 조기유학생 수 : ('01)7,944명 → ('05)20,400명 → ('06)29,511명 → ('07)27,668명
 - * 대학 이상 유학생 수 : ('01)149,933명 → ('07)217,959명(45.4%) → ('08)216,867명(△0.5%)
 - 사업서비스 적자의 경우,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와 수출증가에 따른 해외 사업서비스의 이용증가라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무역서비스·광고·컨설팅 등 국내 사업서비스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미흡한 것도 문제
 - * 국내 디자인, 회계, 컨설팅 등의 사업서비스 생산성은 미국의 28.4%, 일본의 37.6%, EU의 40.3% 수준(통계청)
 - * '08년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90.6억\$) 중 광고·시장·여론조사서비스 비중이 최다(△34.7억\$)
- 소득수준에 비해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크고 적자추세도 지속되어 경상수지를 계속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수지 개선대책이 필요
- 제조업부문 비중이 커 대규모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독일, 일본도 적자규모가 차츰 줄어드는 추세임
 - * 서비스수지 적자 비교('07년) : 독일(△447억\$), 일본(△216억\$), 한국(△198억\$, 세계 3위)
 - * 일본 : ('96)△623억\$(최고치)→('06)△183억\$, 독일 : ('96)△544억\$(최고치)→('06)△335억\$
 - 원천기술의 특허·기술료 수입증가, 규제완화, R&D지원 확대, 고급 인적 자원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수입 증대 기반을 확충, 수지를 개선해야 함

2.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성장 기여도

□ 국내 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국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중이나,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07년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90년에 비해 19%p 증가하였고, 부가가치 비중도 '90년에 비해 8%p 증가하는 등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서비스업 고용 비중(%) : ('90)47.1 → ('95)54.8 → ('00)61.2 → ('07)66.7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 ('90)49.5 → ('95)51.8 → ('00)54.4 → ('07)57.6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70%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57%로 OECD 평균(7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제조업 비중(28%, '06년)은 OECD 국가 중 1위이나, 서비스업 비중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최하위 노르웨이 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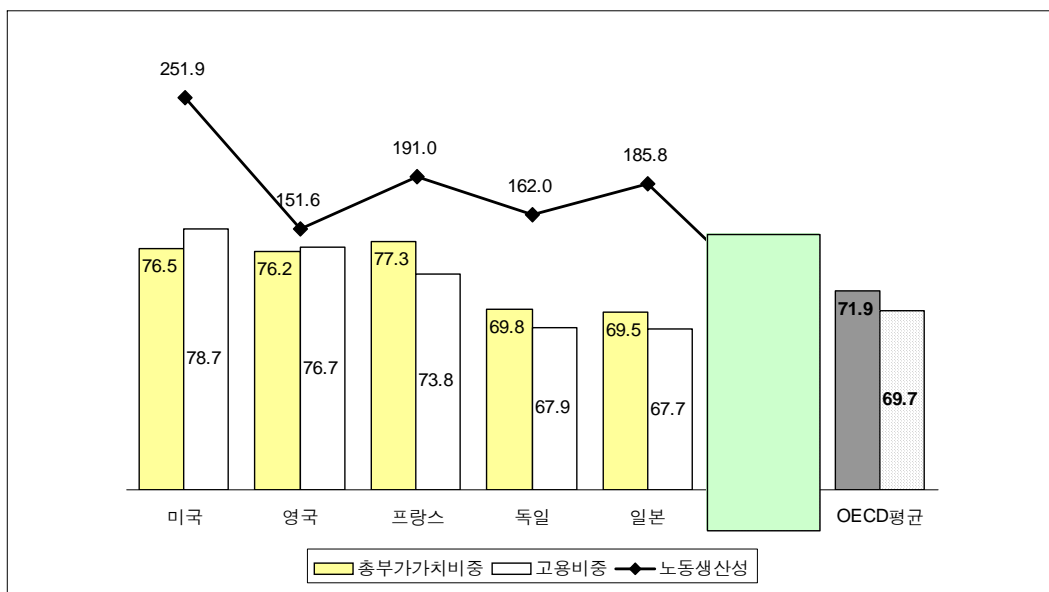
- 제조업 강국이나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임

* 제조업 강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06, %) : 일본(69.5), 독일(69.8), 핀란드(65.1)

* GDP 비슷한 국가 부가가치 비중('06, %) : 체코(59.2), 뉴질랜드(69.5), 포르투갈(72.8)

○ 고용측면에서도 선진국의 고용수준(70%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도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흡함

<서비스산업 국제 비교(% , '06년 기준)>



주 : 노동생산성, 한국 = 100.0 기준

자료 : OECD in Figures 2008 & 노동연구원,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고용전략(2008)

- 서비스업의 GDP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80~'97년중 49%에서 '00년 이후 39%로 감소, 반면 제조업은 동기간 중 24%에서 43%로 크게 증가

<산업별 성장기여율(%)>

	GDP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
1980~1997	100	48.5	24.2	10.6	2.5
2000~2006	100	39.3	42.9	3.1	3.2

자료 : 한국은행, 서비스업 성장부진 요인 분석(2007)

- '95~'03년중 주요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서비스산업의 기여율은 83%로 우리나라의 기여율 53%보다 30%p나 많은 반면, 동 기간 중 국내 제조업의 성장기여율은 41%로 나타나 주요 선진국의 18%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

* 서비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 : 주요국(미·일·영) 77.8%('85~'94) → 82.6%('95~'03)
한국 56.4%('85~'94) → 52.6%('95~'03)

3.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낮은 생산성

□ 저부가가치 업종에의 고용 집중, 규모의 영세성, R&D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져, 부가가치 창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는 '90년 이후 연평균 9%에 달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는 1%에 그쳐, 생산성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95년에 제조업과 비슷했던 생산성은 '05년 이후 제조업의 40%대로 하락

<노동생산성 추이(천원, %)>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연평균 증가율
전산업	16,185	20,396	24,298	28,176	29,213	30,292	3.8
■ 제조업(A)	14,157	21,436	35,230	49,285	54,325	58,520	8.7
■ 서비스업(B)	18,913	20,620	21,578	22,692	23,041	23,615	1.3
(B/A, %)	133.6	96.2	61.2	46.0	42.4	40.4	

주 : 노동생산성 =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자료 : KIET, 서비스산업 R&D투자현황과 시사점(2008)

-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40% 수준, 일본의 50% 수준으로, OECD 주요국에 크게 뒤처져 있음
 -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도 주요국 대비 매우 낮음(미국의 43% 수준)
 - * OECD 27개국 중 25위를 기록, 최하위 수준(멕시코 26위, 슬로바키아 27위)

<주요국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지수 비교('96~'06년 평균)>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벨기에
서비스산업 전체	100	245.8	187.8	146.0	168.0	202.0
• 도소매·음식숙박업	100	401.5	314.4	228.3	238.7	367.5
• 운수·창고·통신업	100	192.5	156.9	153.8	128.1	174.9
•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	100	221.9	312.4	105.2	143.6	150.4
• 기타서비스업(보건, 교육 등)	100	176.6	145.4	113.5	132.9	145.5
※ 부가가치 기준 ('06년, US10,000\$/명)	3.09	7.13	5.63	4.83	4.98	6.15

주 : PPP 적용 지수(한국=100.0)
 자료 : 생산성본부, 생산성 국제비교(2008)

- 금융·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보다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 고용이 집중되는 산업구조로 인해 부가가치 생산에 한계
 -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비중은 주요국 대비 높지만, 생산 부가가치는 적음

<서비스 업종별 고용·부가가치 비중('05년, %)>

구 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고용	부가가치	고용	부가가치	고용	부가가치	고용	부가가치
도소매·음식숙박	26.3	9.8	21.4	13.1	24.2	14.5	19.8	12.2
운수·창고·통신	6.2	7.3	4.8	5.6	5.9	7.1	5.4	5.9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	12.1	20.9	19.5	32.2	19.5	31.7	16.2	29.3
공공서비스(행정·국방)	3.4	6.3	8.4	8.7	6.4	4.8	7.0	6.0
교육·보건·기타서비스	16.0	12.0	24.7	16.5	23.8	17.8	21.2	16.4

주 : 비중 = 서비스 업종별 부가가치/명목 총부가가치, 서비스 업종별 고용/총고용
 자료 : OECD in Figures 2008

-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비중도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임
 - *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법률·회계, 컨설팅, 디자인, R&D 등), 교육, 의료, 문화산업 등
 - * 지식서비스업의 고용비중('06, %) : 한국(24), 미국(40), 프랑스(41), 독일(35), 이태리(30)

- 국내 서비스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자영업 비중이 높아 투자 및 인력개발·활용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실현이 어려워 생산성 저하를 초래
 - 통신·금융을 제외한 전업종이 10명 미만이고 특히 도소매·음식숙박·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서비스산업 전체 평균(4명)보다도 낮음
 - * 업체당 종사자수('05, 명) : 통신(15), 금융(17.3), 사업(12.5), 도소매(2.9), 숙박음식(2.8), 기타 개인(2.3)
 - * 업체당 매출액('05, 억원) : 평균(5.3), 통신(55.9), 금융(102.6), 도소매(6.0), 숙박음식(0.9), 기타 개인(0.9)
 - * 자영업자 비중('06, %) : (한국)32.8, (미국)7.4, (영국)13.2, (일본)13.8 (OECD 평균)16.0
 - 영세성으로 인한 사업체수 과다 등으로 시장의 경쟁강도가 미국 등보다 높아 마진을 저하와 생산성 약화가 가중됨
 - * 한국은 인구 88명당 음식점 1개, 반면, 미국은 인구 751명당 음식점 1개('05년 기준)
- 부가가치 비중(58%) 대비 서비스산업의 R&D 투자가 부진하여 서비스산업의 혁신활동을 저해,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제약
 - '07년 R&D 총 투자(31.3조원) 중 서비스산업의 R&D 투자비중은 7% 수준 (1.7조원)에 불과하고, 제조업과 주요국들 대비 매우 낮은 수준

<연구개발비 규모 및 비중 추이(조원)>

	1998년	2004년	2006년	2007년
서비스업	1.0(12.0%)	1.2(6.9%)	1.5(7.1%)	1.7(7.2%)
제조업	6.4(80.8%)	15.0(88.0%)	19.0(90.1%)	21.3(89.4%)

자료 : KISTEP, 2008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 * 민간 R&D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04년 기준, OECD, %)
 - : (한국) 6.9, (미국) 36.1, (영국) 21.1, (일본) 9.1, (OECD 평균) 23.7
- * 전체 국가연구개발투자비 11.6조원('05) 중 서비스관련 투자연구비는 0.1조원 수준
- 서비스 R&D가 세제혜택 및 정부 R&D 정책·제도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어 서비스기업의 R&D투자 감소·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 R&D 세제지원 대상을 제조업 위주로 제한하고 있어 서비스산업의 세제혜택이 미미
- R&D 투자 저조는 서비스분야의 기술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해외 기술도입의 증가로 서비스 수지 적자가 가중되고 있음
 - * 서비스 기술수지 적자(억\$) : ('02)0.3 → ('03)3.3 → ('04)5.6 → ('05)6.8 → ('06)6.7 → ('07)4.9

4. 과도한 경쟁제한 규제

□ 서비스산업은 각종 진입·영업규제 등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취약

- 서비스 가격규제, 외국 교육기관 유치 제한, 공공서비스 독점 등 과도한 규제와 시장보호로 경쟁을 제한하여 고비용·저효율을 초래, 산업발전 저해
 - 사회공익을 이유로 통신·금융·교육·보건·복지 등의 분야에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이 과다
 - * 서비스 산업 543개 업종 중 67%인 366개 업종에 법적 진입장벽 존재, 지정·허가·독점 등 강한 규제업종도 32%인 172개 업종에 달하고 있음(한국은행, '07년)
 - 서비스업의 대외개방도 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낮은 수준
 - * 서비스 쏠분야 개방수준 비교('99년 기준, 전면개방=1, 부분개방=0.5, 미개방=0)
: 한국(0.442), 미국(0.578), EU(0.513), 일본(0.555) (KIEP분석자료)
- 특히,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의료,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서비스시장을 전문 자격 소지자가 독점하고 있어, 서비스품질이나 가격 개선 노력이 미흡
 - 경쟁제한을 통한 이권추구가 가능하다보니 해당산업의 규제개혁과 혁신 추진노력이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부진한 양상
 - 기업이나 일반인의 전문자격사 고용을 통한 영업과 전문법인 설립이 제한되고 있어(표 참조) 다양한 자본유입을 통한 서비스기업의 전문화·대형화가 힘들
 - 제도개선을 통해 비자격자나 기업 등에게 폭넓게 시장진입을 허용하여,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복합화·다양화) 확대 등을 모색해야 함
 - * 주식회사 병원, 전문CEO출신 병원장·교장 등의 출현이 필요

<전문자격사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 현황>

전문자격사	주요 규제 내용	관련법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한의사·치과의사·비영리법인(학교, 의료법인 등)만 병원 설립 가능 민간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금지	의료법 제33조
약사, 한약사	약사·한약사만 약국 개설 가능 비자격자나 민간법인을 통한 약국 개설 제한	약사법 제20조
변호사	변호사만 법무법인, 법무조합 설립 가능 비자격자나 민간법인의 법인 설립 제한	변호사법 제40조, 제58조의2, 제58조의18

전문자격사	주요 규제 내용	관련법률
법무사	법무사만 법무사합동법인 설립 가능 비자격자나 민간법인의 법인 설립 제한	법무사법 제33조
공인회계사	회계사만 회계법인 설립 가능 비자격자나 민간법인의 법인 설립 제한	공인회계사법 제23조
변리사	변리사만 특허법인 설립 가능 비자격자나 민간법인의 법인 설립 제한	변리사법 제6조의3
세무사	세무사만 세무법인 설립 가능 비자격자나 민간법인의 법인 설립 제한	세무사법 제16조의3
건축사	건축사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가능 비자격자나 민간법인의 사무소 개설 제한	건축사법 제23조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법인 설립 가능 비자격자나 민간법인도 감평사가 사원이나 이사로 참여시 제한적으로 법인 설립 허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
관세사	관세사만 관세법인 설립 가능 민간법인은 운송·보관·하역·종합물류기업 등에 한해서 통관취급법인 설립 가능	관세사법 제17조, 제19조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만 노무법인 설립 가능 비자격자나 민간법인의 법인 설립 제한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
기술사	기술사만 기술사사무소 개설 가능 비자격자나 민간법인의 사무소 개설 제한	기술사법 제6조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가능 민간법인은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의 경우만 중개사무소 개설 가능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만 전문법인 설립 가능 비자격자나 민간법인의 법인 설립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안경사	안경사만 안경업소 개설 가능 비자격자나 민간법인의 업소 개설 제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경쟁을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진입·영업규제 등 反경쟁규제 완화를 통한 자본유입은 R&D투자 및 신기술 파급효과를 촉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
- OECD는 서비스산업 성장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제시
- 일본의 경우도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가 서비스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 업종 평균을 상회

* 서비스산업의 10% 규제완화는 전체 생산성을 0.19%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전 업종 평균의 1.4배(일본 내각부, “구조개혁평가보고서”, '06.12월)

Ⅲ.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 선진국 대비 낮은 부가가치·고용 비중, 저생산성으로 인한 경제기여도 하락,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등 전반적인 경쟁력 악화 우려

☞ 생산성 증대, 수요기반 확충을 통해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지 개선

○ 개방 및 경쟁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질 강화, 각종 인센티브 확대 및 규제정비, 전문인력 육성, R&D투자 확충 등을 통해 투자활성화 및 산업화 유도

- 진입장벽 철폐 등 시장개방을 통한 투자기회 제공 및 경쟁가속화
- 차별규제 개선 및 세제감면을 통한 업종별 경쟁력 확보
- M&A, 구조조정 등 대형화·전문화를 통한 저생산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추구
- R&D투자 확대, 인재육성 등 혁신성 제고를 통한 산업생산성 증대
- 교육, 관광인프라 개선을 통한 해외지출의 국내소비 전환 및 신규유입 촉진
- IT융복합화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성장동력화 추구
- 콘텐츠, IT 등 비교우위 지식기반서비스의 국내외 신규수요 창출, 수입 확대

1. 경쟁촉진을 통한 투자 유인

□ 시장개방 및 차별해소를 통한 자본공급 확대 유도, 산업화 촉진

○ 대내외 개방 확대를 통해 서비스기업의 취약한 경영능력 및 기술경쟁력 제고
- 진입·영업규제 등의 경쟁제한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내 경쟁촉진, 자본 유입, 효율성(전문경영시스템 도입) 등을 추구

* 선진 노하우 전수, 구조조정 활성화(M&A) 등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전문화·대형화 기대

- 의료·법률·회계·세무·건축설계 등의 전문자격자 독점시장에 일반인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자본과 기업 경영시스템을 접목, 서비스 품질개선 및 융복합 신규서비스 시장 창출 도모

- 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차별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
 - 제조업 대비 차별받는 세제, 준조세, 자금조달 등 경영환경 개선 시급
 - * 토지보유세, 환경·교통부담금, 전기·가스이용료 등 부과 과다, 자산평가 불이익 등
 - * 문화·디자인·컨설팅·IT 등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의 투자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법인세 감면 등) 및 정책자금(보증·보험, 대출) 지원

2. 혁신성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인력양성, R&D투자 확대, IT활용도 제고 등에 정책지원 필요

- * OECD('05)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IT기술 활용, R&D활동 촉진, 인적 자원 확충, 규제완화 및 친경쟁환경 조성** 등을 제시
- 연구·인력개발비,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고 지식서비스산업 등 高생산 부문에 대한 정부 R&D 투자 비중 확대
 - 제조업 위주의 R&D지원체제 개선, 서비스업 별도기준 적용과 지원체제 구축
 - *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 법제도 개편에 착수 중(선진화 3단계 대책, '09.1)
 - *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분야(디자인·SW)의 인건비 지원이나 세제감면 혜택 확대
 - ** 서비스기업은 대부분 영세하여(평균 종사자수 4명) R&D 지원 기본요건인 5인 이상 연구인력 확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기준 완화가 필요(업종별 1~3인 차등 적용 등)
- 도소매, 금융, 사업서비스 등의 IT이용 촉진 및 IT산업 활성화 지원
 - 기업 활용 SW(ERP, CRM) 확산 및 IT융복합화(u-러닝, u-헬스 등) 지원
 - IT업종의 투자와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진입규제 완화, 지재권 강화 등 지원
- 기업이 원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이 부족하므로, 고등교육 교과 개편(산업현장 적용) 및 지식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전문교육 지원
 - 선진교육, 산학협력, 사내대학, 인센티브 확충 등으로 전문인력 육성
 - 전반적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종사자의 영어숙련도 제고
 - * 뉴질랜드, 인도는 원활한 영어커뮤니케이션을 장점으로 IT, 콘텐츠, 관광 등의 매출 증대

3. 정책지원 확대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

□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 수출지원, 해외소비 대체 등 국내외 수요 확충

- 기업서비스의 아웃소싱 활성화,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인 통신·IT서비스 및 지식서비스의 해외시장 개척, 관광·교육 인프라 개선 등에 지원 필요
 - 컨설팅, R&D 등 아웃소싱업체 자금지원 및 이용접근성(DB, 표준단가) 제고
 - 교육, 전시컨벤션, 레저상품 등을 적극 개발, 국내외 수요자의 국내소비 유도
 - 통신·IT·디자인·교육 등의 해외진출 위한 인프라·자금·세제 지원 모색
 - * 서비스수출 확대에 필요한 대출·보증·보험 지원 강화
 - * 단체, 무역관, 협회 등 무역네트워크를 통한 시장·제품 정보 제공(시장조사 대행 등)

4. 구조조정, 고용유연성 확보를 통한 고용비중 확대

□ 低생산부문 구조조정, 고용유연성 확보 등을 통한 고용흡수기반 마련

- 산업화 부족으로 제조업 등 타산업으로부터의 고용흡수 능력이 부족하고 해외소비증가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음
- 향후 유입될 타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훈련체제의 재정비 뿐 아니라 산업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서비스 생산성 향상과 고용흡수에 대비해야 함
 - 고용비중이 높은 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저생산성 문제해결을 위한 구조조정 활성화, 퇴출인력의 전환(의료, 사회복지부문 등) 등 대책 필요
 - * 시장정보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한 경영안정, 사업전환, 한계사업체 퇴출촉진 등 활성화
 - * 재취업 교육, 정보·세제지원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로 창업·전환 유도
- 서비스경제화의 진전으로 향후 고용형태가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용흡수를 위한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
 - 파트타임, 재택근무,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의 단시간 근로형태를 통해 여성 및 청년층, 중고령자 노동공급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책 마련 필요
 - * 고용형태에 관한 정보 제공, 취업알선기능 강화 등 노동력 수급 조정기능의 강화
 - * 단시간근로자·희망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의 설치 및 지원
 - * 파트타임, 재택근무, 독립계약자 등 다양한 취업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방안 강구

5.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인식전환

□ ‘산업’으로서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이 영세자영업자 위주로 영위되어 비즈니스가 아닌 생계형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산업 발전에 장애
- 골프장, 고급 리조트 등은 특정 계층만이 소비한다는 인식때문에 타 산업 대비 지원 부족과 차별규제를 겪고 있어 관련 산업육성에 애로
-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비즈니스 마인드 제고 및 서비스산업 육성에 따르는 고용창출 등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한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

IV. 분야별 정책과제

1. 관 광

□ 관광수지 적자 축소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별제도 해소, 세제지원 확대, 수용태세 정비,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육성 등 시급

- 관광은 고부가가치 외화획득산업으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미래 신성장동력
 - * 관광산업의 취업유발은 외래객 지출 10억원당 22.9명으로 제조업(12.1명)의 2배
 - * 관광산업 외화가득률(88%), 자동차(71%), 휴대폰(52%), 반도체(43%), 전산업 평균의 1.3배
- 하지만, 소득과 여가시간 증가로 관광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불균형으로(1:2) 관광수지 적자가 심화
 - 볼거리와 수용태세의 부족,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의 육성 미흡, 차별 규제와 경직적 고용시장으로 인한 낮은 가격경쟁력 등이 적자의 주요 원인
 - * 관광수지 적자 추이 : ('04)38억\$→('05)62억\$('05)→('06)86억\$→('07)101억\$→('08)36억\$
 - * '08년 내국인 출국자 1,199만명(전년대비 10% ↓), 방한 외국인 689만명(전년대비 7% ↑)
- 최근 경기침체, 환율영향으로 해외소비 감소, 일본관광객 증가 등 수지가 일시 개선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수지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필요
 - 정부에서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취약을 인식하고 '08년 세제완화, 규제개선, 인프라 확충 등 강도 높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추진 중
 - * 입국관광객 연평균 증가율('01~'06, %) : (한국)2.7, (중국·일본)11, (아시아)9.4 (세계)5.2
 - * 관광산업 국제경쟁력(WEF, '08) : 세계 130국 중 31위('07, 42위), 홍콩(14), 싱가포르(16)
- 해외골프 등 해외지출을 국내소비로 전환하고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 동북아 역내관광 활성화 등 외래관광객의 신규유입 증가가 시급
 - 특히,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의료관광,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산업, 크루즈 관광 등의 육성이 필요
 - * 의료관광 : 태국(128만명, '05), 싱가포르(27만명, '04), 인도(18만명, '04), 한국(3만명, '08)
 - * 국제회의 참가자는 일반관광객보다 평균 2배를 소비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업종
 - ** 국제회의 개최실적('07 기준) : 한국 268건, 일본 448건, 싱가포르 466건, 중국 255건
 - * 크루즈 시장규모('04) : 총관광객 1,400만명, 총 경제효과 510억불, 동북아 100만명 예상('15년)

- 동북아 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하이·여수엑스포 대비 한일중 공동마케팅, 민간교류 지속, 셔틀노선 정비, 출입국 간소화, 관광DB 공유, 스포츠이벤트 공동개최, 한일 서머타임 동시 실시 등의 민관 공동 노력 필요
 - * 거대관광시장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출입국절차 간소화, 서울시내 차이나타운 활성화,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활성화(불거리 확충) 등 필요
- 가격경쟁력 확보, 서비스품질 제고 등의 업계 자구노력과 함께 제조업 대비 여전히 불리한 규제, 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도 필요
 - * 관광숙박업 토지보유세 중과세, 부담금 비감면, 가스·전기요금 차별, 수도권 골프장 중과세, 골프장·유원지 시설 입지제한, 관광숙박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등

과제명	현행	개선방안
한일 서머타임제 동시 실시	에너지절감, 내수진작,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	서머타임제 조속 실시
국·도립 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활성화	일부 공원만 운행(국립2, 도립5), 호주, 일본 등은 공원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지역내에도 케이블카 운영, 관광객을 유치	외국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도립 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확대, 불거리 확충(친환경시공·관리 통해 환경보존)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 지원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용펀드 등이 필요하나 관련법 미비	관광산업투자회사법 제정 및 펀드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공제
관광호텔 부가세 면세	외국인 사용 객실료+식음료대에 한해 영세율 한시 적용 ('09.12.31까지)	외국인 사용 객실요금+부수용역(식음료대, 통신료)까지 부가세 면세
관광숙박업 부동산 보유세 감면	관광호텔은 보유세로 토지분 재산세(0.4%)와 종부세(0.7%) 등을 부담 중	공장과 동일하게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재산세 0.2%, 종부세 면세)
관광숙박업 부담금 (환경, 교통)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연 2회, 교통유발부담금 연 1회 부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25/100) 교통유발부담금 감면(50/100)
관광숙박업 가스 요금 산업용 적용	관광숙박업 가스요금은 일반용요금(영업1, 645.68원/m ³) 적용	제조업, 광업 등과 동일하게 산업용요금(545.29원/m ³) 적용
관광숙박업 개보수 투자 세액공제 적용	개보수공사는 자본지출로 처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서 제외	숙박업 대규모 개보수공사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부담 완화 (지방 골프장과 동일수준 적용)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은 재산세(0.2~4%), 종부세(0.75~2%), 개별소비세, 체육기금 등 직접세·간접세 부담이 높음	제조업과 동일하게 보유세 분리과세 허용(0.2%) 및 개별소비세·체육기금 등 폐지 · 지방 회원제 골프장은 '08.10.1부터 보유세 감면, 개소세, 체육기금 폐지 등으로 그린피 20% 인하효과 보고 있음

과제명	현행	개선방안
수도권 수질보전지역내 골프장 입지 제한 완화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은 농경지사용량보다 적으며, 오수처리도 철저히 해 하천수질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고 있으나, 수도권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 지역내 골프장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골프장 입지난을 겪고 있음	골프장 개발사업은 여타개발사업보다 환경오염도가 낮으므로 수도권 특별 대책지역 2권역내 골프장의 입지를 허용(수도권내 골프장 공급 부족 해소 및 해외골프 수요의 국내소비 전환 기대)
유원지시설의 용적률 상향 조정	자연녹지내 유원지시설의 용적률 제한으로(100% 이하) 시설활용도가 떨어져 수익성 악화	자연녹지내 유원지시설의 용적률 상향(100%→200% 이하)
관광진흥기금의 항공부문 사용	기금의 주요 재원이 항공사 출국납부금(1만원)인데, 항공운송업은 기금 사용처에서 제외되어, 지원이 없음	기금의 목적이 외화수입 증대인만큼 외화획득사업인 항공운송에 대한 지원 필요(기금 지원대상에 포함)

2. 의 료

□ 시장개방(주식회사 병원)을 통한 투자확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관광·u-헬스 등 융복합 신규수요 창출 등에 대한 지원 필요

- 의료산업은 국민생명권 확보라는 본질적 가치 외에, 부가가치가 크고 IT·BT 등 신성장산업의 수요산업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높음
 - 의료산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생산성이 낮으나 고용창출 효과가 큼
 - * GDP비중 3.2%('07, 25조원), 고용비중 3.4%('06, 53만명), 생산성 25.3백만원(전산업 43.8백만원)
 - * 10억당 취업유발계수('03) : 의료(19.5), 제조업(12.1), 전산업(16.9)
 - * 의료수준 OECD 24개국 중 5위('04), 기술수준은 미국의 76%, 일본 85%, 유럽 87% 수준
 - * 국내 의료서비스산업 규모는 미국의 1/34(871조원), 일본의 1/15(378조원) 수준
- 진입·영업규제로 인한 토털 의료서비스 제공기반 취약, 수익성 저조, 자본조달 애로,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취약 등이 의료산업의 문제점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금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등 의료시장은 정부가 공급과 수요를 통제하고 있고, 공공의료(11%)가 취약하여 실제 의료서비스는 민간이 전담하며, 공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본인부담이 높은 편
 - * 본인부담률('05) : 한국 37.2%, 프랑스 6.9%, 미국 13.1%, OECD 평균 20.2%

- 의료를 민간에 위탁하고도 규제로 법인의 영리활동을 제한하여(배당금지), 자본투자가 저조하여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의료의 질 제고가 힘들
- *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이익률은 1% 미만('07)으로 경영을 통한 자본조달이 어렵고 금융기관도 회계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장기대여를 기피, 우수인력·장비투자에 애로
- ** 종합병원 차입의존도('07, 차입금/총자본) : 17% 수준, 이중 단기차입금은 29% 수준

- ☞ 법상 영리의 개념은 수익배분이 가능함을 의미. 따라서 영리병원은 주주에게 이익배분이 가능할 뿐, 논리필연적으로 건보 강제지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법인은 아님
- ☞ OECD 국가 중 한국, 일본, 네덜란드 정도만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중국, 태국 등 아시아국가 대부분은 제도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상장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은 영리병원 발생수익의 해외송출도 허용

- 의료산업에 시장경제원리 도입과 개방을 통한 경쟁촉진 시급. 관건은 민간 부문의 의료서비스부문 참여를 통한 자본조달과 투자 활성화임
- 영리병원(주식회사 병원) 허용시 우수인력·장비 투자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이 기대됨
- 아울러 자본조달 다양화로 관광·IT·BT 등 연관산업와의 융복합을 통한 의료관광, u-헬스, 디지털병원, 난치병치료, 요양서비스 확충 등 새로운 서비스 영역 개발과 수익다변화가 가능
- 병원 전문화·대형화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편과 고용증가도 기대
- ※ 영리병원 도입시 초기에는 의료인의 지분 참여 및 수익금의 일정비율 의료기관 재투자 등을 의무화하는 특수 영리법인부터 시작해서 주식회사형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대안임

과제명	현행	개선방안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통한 투자 확대	의료기관은 의료법인(재단법인)과 비영리법인만 설립가능하고 영리행위도 금지	주식회사 법인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시장을 개방, 투자 활성화 촉진
민간보험 활성화로 건보 재정건전성 확보	건강보험의 저부담·저급여체계 개선을 위해서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함께 민간부문과의 합리적 역할 분담이 필요	新의료기술, 고급의료, 편의서비스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민간보험의 부담을 활성화하여, 건강보험을 보완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영리행위는 금지되면서 법인세가 과세되어 부담이 과중되고 있음 (외국은 세제감면)	법인세 부과는 영리병원 허용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 필요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의료관광이 외국인 대상 알선행위의 허용 등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나, 환자 유치과정 및 치료과정에서의 분쟁시 해결프로세스가 없고 연계관광상품 등이 미흡	해외환자 의료분쟁 관련제도 마련 및 의료관광 원스톱 시스템 구축, 전문 통역사·에이전시 육성, 의료종사자 서비스 교육 지원 등 정책지원 필요
u-헬스 활성화 지원	원격의료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직접 진료 금지, 현지의료인에게 지식·기술만 전달) 의료분쟁시 책임소재가 모호함	원격의료의 범위 확대(재진시 직접 진료 허용), 주치의 제도 허용, 원격 처방전 교부 허용 등 제도 개선 필요
	의료기관과 u-헬스 장비업체, 통신 업체 등과의 전략적 제휴가 힘들어 비즈니스 모델개발이 미흡	u-헬스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요건 및 건강정보 등 각종 기준·기술 표준 신설, u-헬스 부문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 (노인요양서비스 확대) 등 추진

3. 교 육

□ 시장개방과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부문의 경쟁을 촉진, 경쟁력 제고

- 수요자의 발전요구 거부, 경쟁과 평가 회피 등으로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이 낮음
- 낮은 공교육 만족도로 인해 사교육비 증가, 해외유학 증가 등 문제 발생

* 유학연수수지 적자('08, △44.2억불)가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의 26% 차지, 수지개선에 악영향

- 대학교육은 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 등으로 경쟁력 상실(국가공헌도 최하위)

<고등교육 경쟁력 국제비교>

구 분	미국	싱가포르	홍콩	한국
2008 World's Top 200 Universities(The Times)	58개	2개	4개	3개*
2006 The Top 100 Global Universities(Newsweek)	43개	2개	3개	없음
2008 IMD 국가경쟁력 평가(총 55개국)				
▪ 교육부문 순위	12위	1위	24위	<u>35위</u>
▪ 대학교육이 경쟁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5위	1위	15위	<u>53위</u>

* 서울대 50위, KAIST 95위, 포항공대 188위, 연대 203위, 동경대 19위

- 자율 확대와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교육만족도 제고
 - 중등교육 인프라(기자재·교사) 확충, 대학경쟁 활성화(국립대 법인화) 지원
 - 교육다양성과 경쟁촉진을 위해 해외대학 유치, 영리교육법인 허용 등 추진
 - * 싱가포르, 두바이 등은 해외 유명대학을 적극 유치하여 교육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중
- IT융합(e-러닝, u-러닝)을 통해 고부가가치 교육서비스를 활성화, 고용 창출
 - e-러닝은 교육산업화의 기반으로 지식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에 효과적
 - * e-러닝 시장규모 : ('04) 1조 2,984억원 → ('08) 1조 8,704억원, 연평균 7.6% 성장
 - * e-러닝, u-러닝, 디지털교과서 등 '13년까지 4,000억원 시장과 28,000여명의 취업 창출 기대

과제명	현행	개선방안
해외대학 국내유치 활성화	해외 비영리법인만 학교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수익금(잉여금)의 해외본교 송금 불가 및 지자체의 인센티브 미흡 등으로 해외우수대학 유치에 애로가 많음 · 광양 네덜란드 물류대학 1곳만 운영중	대학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대학설립 자격요건을 영리교육기관까지 확대, 투자대상을 확대하여 해외대학의 국내유치를 촉진하고 아울러 학교시설·교사 규정 완화, 세제감면 등도 확대
교육정보 공개 활성화	학생·학부모의 교육·학교정보에의 접근이 학교의 준비부족과 정보공개 거부감 등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음	알권리 충족과 교육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학률, 취업률, 학교평가결과, 운영상태, 교원정보 등을 적극 공개
e-러닝산업 적극 육성	인력부족과 영세성 등으로 인해 R&D 투자 및 해외 진출에 제한	공공부문의 e-러닝 도입 확대 및 중소기업에 e-러닝 바우처 제공, e-러닝부문 정부 R&D 투자 확대, 컨설팅·자금·수출보험 제공 등 수요기반 확충 지원

4. 문화콘텐츠

□ 자금지원(융자, 완성보증제), 지적권 보호 강화, 수출지원 등 시급

- 문화콘텐츠 산업은 미디어융합 확산, IT의 발달 등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소스멀티유스 속성으로 타산업(제조, 관광)의 동반성장을 견인
 - * '07년 전체규모 62조원, '04~'06년 중 연평균 매출증가율 9.4%, 수출증가율 29.6%
- 지식·노동집약형 구조로 고용창출이 많고, 온라인게임, 한류드라마를 제외하고는 세계시장에서 비중이 낮아(2.4%, 9위) 내수 위주의 산업특성을 보임
 - * 고용증가율('00~'07년) : 콘텐츠산업 4.38%, 제조업 -0.59%, 전산업 1.47%
 - * 부가가치 비중('07) : GDP대비 2.5%(23조원). 미국, 영국 등은 GDP의 5% 상회
 - * 온라인게임('07) : 전세계 35%(1위) 점유, 국내시장규모 2조 2,000억원, 수출 7억 8,000만불
- 자금조달 애로, 불법복제, 인력(창작·기획)부족 등으로 수급 확대에 한계
 - * '01~'07년 기간 중 불법복제로 인한 매출손실 20.8조원, 고용손실 16.6만명 추정
 - * 온라인 불법복제 추이('05) : 영화(3,199억원), 음악(3,940억원), 게임(3,400억원)
- 산업화를 저해하는 불법복제를 근절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금확충, 완성보증제 활성화 등의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확대로 투자활성화 필요

과제명	현행	개선방안
자본투자 활성화	문화진흥기금폐지('06)로 자금조달에 애로(담보여력이 적어 중기청 융자 중 문화관련 융자는 1% 내외에 불과)	콘텐츠진흥기금을 신설,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가치평가기준을 마련, 지적권을 담보로 한 자원조달을 활성화
	완성보증제가 시범운영중이나('08), 지원규모가 적고 지원분야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짐(선택과 집중 필요) · 게임, 영화 등 총 4건, 9억원 발급('08)	완성보증제 활성화를 위해 심사기관의 전문성 제고, 보증재원 확충, 제도 초기에는 영화위주의 보증지원 등 제도 개선
지적권 보호 강화	수익성 악화의 주요원인인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단속 강화와 낙후된 유통구조 개선, 인터넷 정보제공자 의무 강화 등의 대책 마련 시급	웹하드, 포털, P2P 등의 상습 불법복제 상시 단속 및 처벌 강화, 불법복제 방지 캠페인, 불법복제 서비스제공자의 합법적 서비스로 전환 유도 등 추진
수출활성화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금융지원,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에 대한 각종 지원 시급	수출보험 확대(現 영화만 적용), 마케팅 등 컨설팅 제공, 수출펀드 조성 등 제작·유통 활성화 지원

과제명	현행	개선방안
R&D 및 세제지원 확대	방송, 영화 등 일부 업종만 중소기업으로 규정되어, 게임, 애니, 공연 등 많은 문화콘텐츠기업들이 각종 중소기업 정책지원(R&D 지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지원효과가 미미함	정부R&D 지원대상 및 민간R&D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비) 대상에 콘텐츠 분야 포함, 지원 비중 확대 아울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콘텐츠 분야로 확대
전문인력 육성	문화콘텐츠 산업은 여타 분야와 융합,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플랫폼 산업으로서 중요하나, 인력유입이 줄어들어, 인력난 심화중	보조금 확대, 컨설팅·수급정보 제공, 기업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사내대학 활성화, 중장기 교육시스템 등 정책 지원 확대

5. IT서비스

□ 전문기업 육성, 거래관행 개선, 해외진출 확대로 수요기반 확충

- 정보화노력으로 IT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나, 통신 등 주력분야의 포화상태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신규 시장 발굴이 필요
 - * 세계 시장 '07~'12까지 연평균 7.8% 성장, 한국은 5.3% 성장예상(국내시장 '07년 5조 5,650억원)
 - * 세계 IT 관련 시장(7,280억달러) 중 한국 시장점유율은 1.1%('07년)
- IT서비스의 경제 비중도 선진국 대비 낮아 새로운 수요 발굴이 시급
 - * '06년 IT서비스 비중은 8.3%로 OECD 국가 중 중하위, 반면, IT제조업 비중은 21.1%로 1위
- 적자 산업화(과당경쟁), 신기술 제도·표준화 정비 지연, 공공부문 기능 미흡, 우수인력 기피 등으로 산업화가 지연, 글로벌 수출경쟁력 부족 초래
 - * 특히, 후진적 발주관행(인력 위주 성과관리, SW라이선스 불인정)은 만성적 공급초과, 대기업 참여 제한, 백화점식 사업 양산 등을 초래, 기술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의 출현을 제한
- 신기술 확산과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표준화 기반 마련, 공공시장 확대 및 거래관행 개선, 분야별 전문기업 육성, 우수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추진
 - * 특히 SW(SI, 패키지, 임베디드) 산업은 고용창출과 성장성이 크므로, 집중 지원 필요
 - ** 세계 SW시장 '11년까지 11,200억불 규모로 성장, SW 국내 고용창출 효과 24.4명(제조 2.1명)

과제명	현행	개선방안
해외진출 활성화	통신 등 우수 IT서비스의 해외진출은 연관산업의 경쟁력제고에도 크게 기여함(통신+장비+SW+단말기, SI+연관기업) 중국 등 선진국은 지원펀드를 조성,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나 국내는 세제혜택, 전용펀드, 마케팅지원 등의 정책지원이 미흡	민관 전문펀드 조성, 남미·중동 지역의 국제공동시범사업 추진, 개도국 IT컨설팅 지원 강화, 해외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 투자세액 공제 확대 적용, 해외양도차익 손금산입, 대중소기업 패키지 진출 지원 등을 적극 추진,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공공발주 거래관행 개선	대기업 입찰제한, 발주자 관리편의를 위한 투입인력 위주 관리, 최저가 낙찰(덤핑 수주) 등 후진적 거래관행으로 인해 업체적자 가중, 전문성 부족, 해외진출에 대한 절박감 부족 등 초래, 전문기업 육성에 실패하고 있음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적정예산 편성 및 최적가입찰 정착, 신기술 공공투자 확대, 지재권 보호, 공정위주의 성과관리, 발주자 요구사항 문서화 등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 및 거래관행 선진화 추진
신기술 관련제도 정비 및 표준화 가속화	IPTV, 홈네트워크, u-헬스 등 신기술 서비스 관련 제도·표준 정비 지연으로 초기 수요 창출 실패, 서비스제공 등에 애로	융복합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제도 정비, 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국제표준 선점, 자율·사후심의의 확대를 통한 SW 비즈니스 촉진(1인 창조기업 육성 촉진)
전문인력 육성	적자산업화와 많은 근로시간으로 우수인력 유입이 저하되고 있고 IT융복합화 추세에 맞춘 글로벌 인력 부족 심화 중	학제간 융합·산학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산업현장을 반영한 전문교육시스템 개발 및 자격기준 운영 등

6. 유통

□ 대규모 유통시설과 관련한 유통시설용 적정부지 확보 곤란, 복잡한 인허가 절차, 과도한 부담금, 영업활동 규제 등의 개선 필요

-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환경과 소비자 니즈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유통시설을 대형화·복합화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
 - 국내도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중심으로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임
 - * '06년 기준 대형마트 346개, 백화점 81개로 대형마트는 증가추세, 백화점은 감소추세
 - * '08년 기준 복합쇼핑몰은 4개가 운영중이나 14개가 추가로 건설중임

- 최근 건설중인 대규모 유통시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투자와 고용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08년 건설중인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몰 등 대형 유통시설의 총 투자금액은 15조 3,000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10만 6,000명으로 추산
- 각종 입지규제 및 출점제한, 차별적인 부담금 부과, 옥외광고·판촉활동·셔틀버스 운행 등 각종 영업제한 규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

과제명	현행	개선방안
대규모 유통시설용 입지제한 개선	자연녹지내 토지이용에 제한이 많아, 지하를 활용한 매장건설 등으로 인해 건설비 상승 (건폐율 20%, 용적률 100%, 형질 변경 면적 1만㎡ 이내)	건설비 절감과 산허리 절개 건축 근절 등을 위해 토지이용 규제완화 (건폐율 40%, 용적률 150%, 형질 변경 면적 3만㎡ 이내)
	유통시설은 개발제한구역내 창고 증축허용 대상에서 배제 (공장은 증축 관련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조성된 창고의 경우, 건축허가시 허용된 기준 적용, 증축규제 완화
	대규모 유통시설의 지방영업점 출점시 지자체 행정지침을 통해 불허	합리적·법적 근거없는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및 반려행위 금지
부담금·세제 등 차별적인 부과제도 개선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중복 성격의 부담금 과다	과밀·교통유발, 환경·하수도 부담금 등 중복성 부담금 통폐합 필요
	인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한 사업자의 공공시설 설치부담 과중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시설물만 설치 (부담비용은 최대, 사업비의 5%를 초과할 수 없게 제한)
	전기·가스요금이 산업용으로 분류되지 않아 경쟁력 저하	제조업과 동일한 산업용 요율 적용
영업활동 규제 완화	셔틀버스 운행금지로 대규모 유통시설의 교통혼잡 초래	교통·주차체증 감소위해 셔틀버스 운행 허용
	기존 백화점의 옥외광고 기준을 적용하여, 교외형 아울렛 등 신업태 유통시설 광고시 애로 (옥상간판은 3층 이상 건물만 설치, 가로간판은 1개만 허용)	교외형 아울렛은 대부분 단층건물이고 옥외간판이 아니면 식별이 곤란하므로 층수제한 규제, 가로간판 허용갯수 제한 규제 등 완화
	유통시설 야외부지내 판촉활동 금지	판매행위가 아닌 판촉활동 및 이벤트는 제한적으로 허용

7. 디자인

□ 기업체 디자인 역량 강화, 디자인 전문기업의 대형화·전문화, 우수인력 공급 등으로 시장 규모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디자인산업은 高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음

* 국내 디자인 시장규모 : ('01년) 4.1조원(GDP의 0.65%) → ('07년) 8.6조원(GDP의 1.02%)

* 부가가치율('06) : 디자인 43%, 영화·연예 39%, 반도체 32%, 자동차 17%

○ 인식부족, 영세한 경영환경으로 인해 기업규모별 디자인 역량차이가 크고, 디자인 전문기업의 영세성·전문성 부족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

* 한국 디자인경쟁력 : ('02)25위(뉴질랜드 경제硏) → ('05)14위(헬싱키대) → ('07)9위(헬싱키대)

* 디자인 기업 매출('06) : 926백만불(영국의 10%, 일본의 16.4% 수준)

- 특히 최근 트렌드인 통합디자인(디자인+창조성+비즈니스) 창출 능력의 저하와 산업현장과 괴리된 인력공급 등도 문제

* 디자인교육이 종래의 조형위주의 디자인 교육에 치중, 통합디자인 수행능력 떨어짐

* 매년 3만 8,000여 명의 디자이너가 배출되나 취업률은 30% 수준에 불과

과제명	현행	개선방안
디자인정책의 체계적 추진	국가차원의 통합적 디자인전략 없이 부처별로 디자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시너지효과가 부족 (산업디자인은 지경부, 공공디자인은 문광부·행안부·서울시 등 담당)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디자인예산의 확대를 통해 디자인 창조기업 육성이 필요(디자인 부문의 정부R&D 투자 확대 등 추진)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제조업의 디자인투자 비율이 매출액의 0.3%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고(영국 3% 수준), 자체 디자인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체 비율도 21%에 불과함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영 강화를 위해서 디자인 인력 채용시 지원금·세제감면 등을 지원하고 디자인 바우처, 컨설팅 쿠폰 제공 등도 필요
우수인력 육성	산업계는 특성화 인재를 요구하나, 대학은 시각, 섬유, 제품 등 정형화된 인력만을 교육, 취업률이 저조하고 특히 남성대비 여성의 전공비율은 높지만(3:7), 여성인력의 취업률은 저조(2:1)	특성화 대학 및 기업맞춤형 교육과정(모듈·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디자인 교육을 전면 개선하고, 아울러 디자인 컨설턴트 관련 교과 개발, 맞춤형 여성 인력 등을 집중 육성

과제명	현행	개선방안
디자인컨설팅기업 육성	<p>시장조사, 기획, 상품화, 브랜드관리까지 디자인전문기업의 영역이 확대 중이나, 국내에는 컨설팅 제공까지 가능한 디자인 컨설팅기업이 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디자인컨설팅기업이 90년대 이미 600개를 넘어섬 	<p>디자인컨설턴트 인증제 사업 실시와 디자인 전문기업의 컨설턴트 양성 지원 (고용금, 세제감면, 교과개발 제공 등)</p>